

변화에 대한 대처

최근 우리를 중심으로 한 주변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 계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 방재 업무는 경제의 영세성, 산업 시설의 빈약과 소규모 등으로 주로 정부에서 주도하여 왔으나, 경제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건물과 산업시설 등이 대규모·복잡 과밀화함에 따라 위험 또한 다양화·특성화되고, 재해시 피해 정도도 대형화되어 관 주도형으로서의 한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각 위험분야별로 민간 전문단체로 하여금 방재활동을 전담케 하는 추세에 있다.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사(87년 가을 설립 예정) 등의 실례가 그것이다.

국가 방재 중 화재 예방 측면에서는 우리 협회를 비롯하여 수개 단체가 예방활동을 펴 오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면서 보다 효율적인 국가 소방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 동안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 오던 “소방 시설 검사” 업무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들이 14여년 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의 긍정적인 평가 및 그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민주화라는 거대하고, 도도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은 국가적 대사업은 국민, 국가, 수임단체(受任團體) 등 삼위가 합리성과 명분이 정립될 때 무리없이 연연 세세(年年世世) 잘 되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없이 양질의 방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손해 보험 업자와 관련 있는 단체로 하여금 수임(受任)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보험업자에게는 보험료의 일부를 사회 공익 사업으로 환원시켜 국가 방재에 기여한다는 명분과 기회를 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손익(損益)에 관계되므로 적극적인 방재 활동 등으로 이익을 도모한다는 메리트(merit)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입장에서는 화재 예방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으므로 소방력 낭비, 상호 기술 교류 및 연계성(連繫性) 결여, 민원해소 등 제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절감된 예산과 인력으로 화재 진압 활동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재 기술 개발 및 축적면에서도 국가 간에는 기밀성(機密性), 정책적인 사항 등으로 기술 교류의 한계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험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공동분배(국제간 재보험 형태로 공동대처)하므로 방재 기술의 상호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 기업의 이해(利害)에 관계되므로 적극성을 띠게 될 것이고, 따라서 선진 방재 기술의 도입도 용이하다는 큰 이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러한 커다란 변환의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통찰(洞察)하고 다같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